

제차 중장기보육계획(06~10) 수립상황 및 주요내용

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제1차 중장기계획('06~'10)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성과 및 비전을 확인하고 적극 홍보하고자 함

1.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

- 보육 수요·공급의 중장기적 전망 하에 보육정책을 기획·집행하기 위하여
 - 영유아보육법을 개정('05.1)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·추진하게 되었음
- 여성가족부는 보육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, 관계부처 회의개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왔음('05.4 ~ '06.1)
 - 기본보조금 여부 및 차등보육료 확대방안, 보육료 자율화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, 영아보육 활성화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
 - 향후 공청회('06.2.16),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의결('06.2.23), 대국민홍보 예정

2.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성과

□ 보육시설 및 보육재정 대폭 확대로 정책공약 실현

-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수 지속적으로 증가, 보육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, 지원아동수 '02년 대비 4배 증가
 - ※ 보육시설: 22,147개소('02) → 28,040개소('05), ※ 이용아동 : 801천명('02) → 972천명('05)
 - ※ 보육예산(억원): 2,103('02) → 3,120('03) → 4,050('04) → 6,001('05) → 7,910('06)
 - ※ 지원 아동수: 11만명('02) → 27만명('05) → 41만명('06)
- 차등보육료, 만5세아 무상보육, 장애아무상보육 실현 [대선정책공약]
 - ※ 차등보육료(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: '04년 50%까지→'05년 60%까지→'06년70%까지)
 - ※ 만5세아 무상보육 '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%까지, 장애아지원제도 '03년 신설

□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공보육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

-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
 - 전국보육실태조사('04.12~'05.2)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
 -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「보육시설 평가인증제」 도입 [대선정책공약]
 -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으로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

-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
 - 보육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육행정 정보화전략(ISP) 수립
 - 「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」 운영(중앙 및 16개 시·도)
 - 보육료 수납시 현금 대신 지로나 자동이체 방식 의무화
-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
 - 대한주택공사 건설 국민임대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('05.9)

3. 보육사업 현황 및 한계

- 보육사업이 규모 면에서 급격히 팽창하였으나, 민간 위주로 확충
 - 전체 시설 중 국공립·법인시설 수가 13.9%이고, 이용 아동 기준으로는 30%
- 보육서비스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
 - 국민의 88%가 안심하고 이용할만한 시설을 찾기 어렵다고 함
 -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46.4%에 불과, 특히 영아 이용률이 19.6%로 저조
- 전체 보육비용 중 정부 재정분담률은 35.8%에 불과
 - ※ OECD 국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재정분담률은 평균 60% 이상

4. 중장기 보육계획(안) 기본 방향

- 지역별 수급현황에 따른 시설확충계획 수립 및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제고
 - 국공립보육시설 두 배 확충 : '05년 1,352개소 ⇒ '10년 2,700개소
 -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제고 : '05년 46.0% ⇒ '10년 60.0%
- 선진국 수준의 보육비용 정부 재정분담률 제고
 - 정부 재정분담률 : '05년 35.8% ⇒ '10년 60.0%
 -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아동 : '05년 41.7% ⇒ '10년 80.8%
- 민간시설까지 기본보조금 지원
 - 민간시설 기본보조 도입과 함께 지원시 서비스 질 관리 강화
 - ※ 단, 기본보조를 수령하지 않는 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허용 검토
- 보육서비스 선진화 및 취약보육 영역 지원 활성화
 -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확대
 - 장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,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
 - 보육시설 환경개선, 건강·영양·안전기준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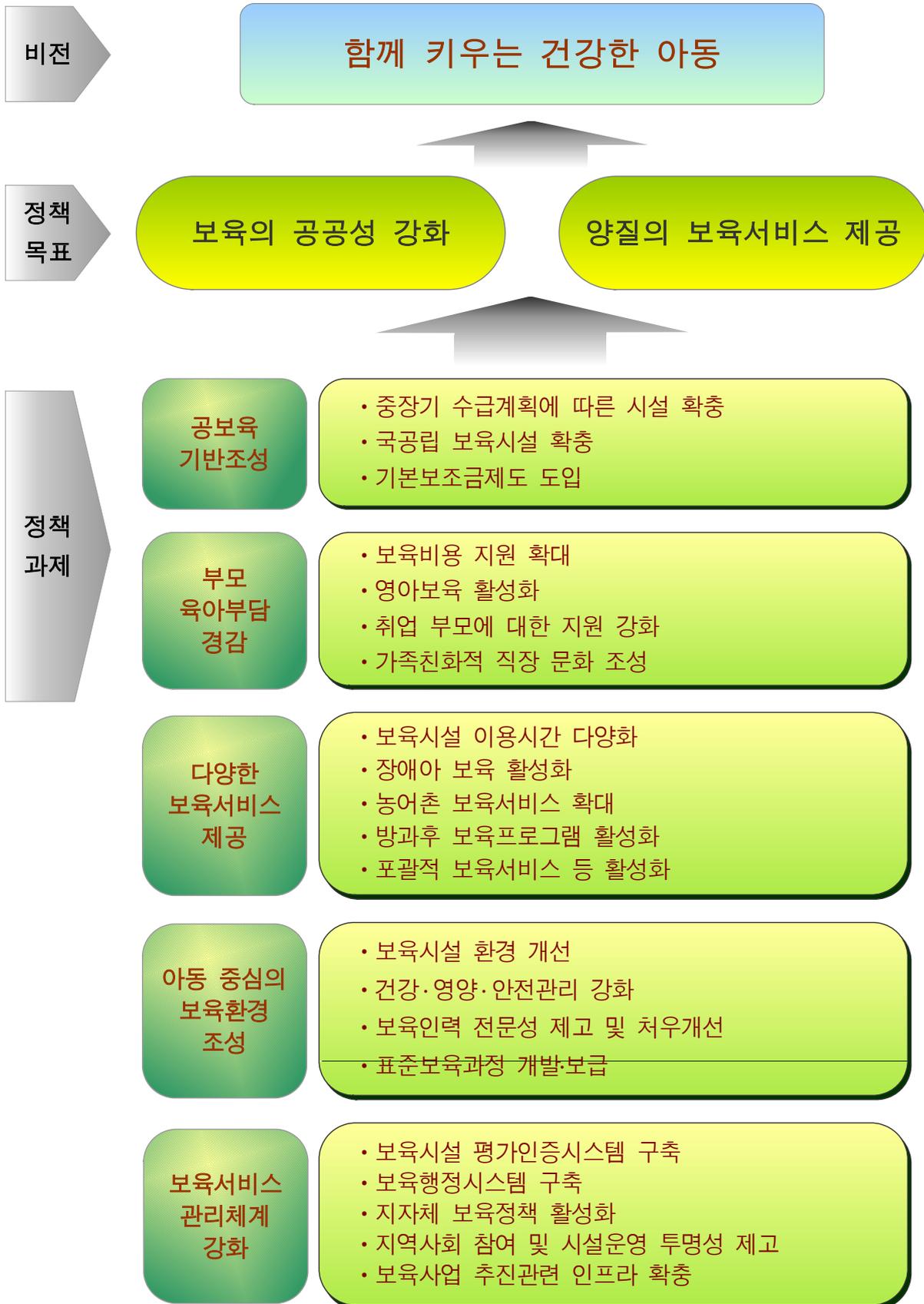
※ 별첨 :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(요지)

5. 보육정책 주요 지표 전망

주요 지표 변화

주요지표		2005		→	2010	
보육비용 정부 재정분담률		35.8%		→	60%	
국공립 보육시설 수		1,352개소		→	2,700개소	
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		92만명		→	114만명	
보육료 지원아동 비율		41.7%		→	80.8%	
보육시설 종사자 수		131천명		→	180천명	
민간보육시설 보육비용/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		80%수준('06년)		→	100%수준	
평가인증 대상 시설		1,000개소 (시범 운영)		→	전면 실시 (매년 1만 개소)	
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	유아	46%	68.6%	→	60%	88.4%
	영아		19.5%			33.4%

[별첨]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[요지]



과제1

공보육기반조성

□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

-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 보육수요 및 자체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의 수급 계획 수립

※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2010년까지 추가 보육수요는 20만명

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

-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확충

-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목표 : 1,352개소('05) → 2,700개소('10)

- 다양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

-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
-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 국공립화

※ 2010년까지 598개소 무상제공

- 도시공원 내 신축, 민간보육시설 매입, 대학부지 및 공공건물 활용 등

□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

- 민간시설 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임

- '07년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과 함께 가격규제 예외 시설 일부 허용 검토

- 기본보조금 지원을 평가인증, 보육교사 급여 등과 연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

□ 보육비용 지원 확대

- 아동별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국공립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
 - 민간시설 아동 연령별 보육료가 최대 14.3%까지 경감
-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을 '0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%까지 확대
 - ※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 : 272천명('05) → 771천명('10)
- 농어촌 지역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'06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%까지 우선 확대
- 모든 장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 시설 지정을 확대
- 다자녀 보육료 지원비율을 현행 보육료의 20%에서 50%까지 확대
-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'07년부터 무상 보육 지원

□ 영아보육 활성화

- 기본보조금 확대로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
 - ※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(0세 기준) : 150천원('05)→374천원('10)
-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 「가정보육교사제」 도입 또는 가정보육 시설 정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
 - ※ 가정보육시설 설치규모 변화 : 5~10인('91)→ 5~15인('94)→ 5~20인('96)

□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

-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- 취업여성의 영아 양육 지원을 위한 '아이돌보미' 파견 사업
- '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'에 대한 입소 우선 순위 상향 조정
-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 차등화
 - 보육료 지원대상을 반일제, 종일제 아동으로 구분하고, 종일제는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

과제3

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

□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

-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('05년 2천명 → '10년 9천명)
- 일정한 교육을 받은 중고령자 육아도우미를 시간제 보육시설에 지원('07년부터 매년 2천명)

□ 장애아 보육 활성화

-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매년 10개소씩 확충하고,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을 매년 100개소씩 확대 지정

□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

-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우선 지원
-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 지원 확대 및 운영비 현실화
※ '05년 15만원/월 → '06년 20만원/월
- 농어업인 양유아가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 기준을 확대(현행 2ha → 5ha)하고,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어업인에게 육아비용 지원(농림부) ※ '06년 연령별 40~79천원/월

□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부모협동보육 활성화

-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, 부모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
※ '07년 시군구에 1개소씩 250개소, '08년 500개소 확대
- 부모협동보육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·보급

□ 보육시설 환경 개선

- 취약 지역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 확대
 - 매년 증개축비 100개소, 보수비 400개소, 장비비 900개소
- 아동 특성에 적합한 시설 표준 모형 개발

□ 건강·영양·안전관리 강화

- 건강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과 보건소 및 인근 병원과의 연계시스템 구축
-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「보육시설 안전 공제회」 설치 추진

□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

- 대학의 보육교사 양성교과목(학점)을 12과목(35학점)에서 15과목(42학점)으로 상향 조정
- 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도입('07년 시행)
-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

□ 표준보육과정령 제정

- '05년에 개발한 표준보육과정 입법화 추진('06년)
- 연령별(3단계)·특성별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□ 평가인증시스템 구축

- '06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'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1차적 평가인증 시행
- '09년 이후부터 모든 보육시설이 매 3년마다 1회씩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
-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가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을 시행한 '09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

□ 보육행정시스템 구축

- 보육행정의 효율성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부-지자체-보육시설을 연계하는 보육행정시스템 구축
- 재정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
- '06년 상반기 시범시행 후 점진적으로 전국 확충

□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

- 보육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,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
- 지자체별 보육정책을 매년 평가하고, 보육사업 수범도시를 선정

□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

- 부모,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및 지자체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
- 민간보육시설 대표자를 시설장 자격요건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